

01. ④ 02. ⑤ 03. ① 04. ② 05. ④ 06. ③ 07. ④ 08. ③ 09. ⑤ 10. ④
11. ① 12. ③ 13. ① 14. ③ 15. ② 16. ⑤ 17. ⑤ 18. ⑤ 19. ④ 20. ①

1.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 이해

정답 해설 :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으로서 (가)는 간접 민주제, (나)는 간접 민주제에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혼합 민주제에 해당한다. 직접 민주제나 간접 민주제는 모두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직접 민주제가 간접 민주제에 비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국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는 참여 방식이라고 평가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국가에서 국민이 모두 참여하여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②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제도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실현하는 제도들이다.
- ③ 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민주제보다 직접 민주제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는 확대된다.
- ⑤ 직접 민주제나 간접 민주제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상의 차이이다.

2. 법치주의의 유형 파악

정답 해설 :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나타낸다. (가)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반면, (나)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⑤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가)는 ‘법에 의한 지배’, (나)는 ‘법의 지배’로 일컬어진다.
- ② (가)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는 반면, (나)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 ③ (나)는 독재를 막는데 기여하지만, (가)는 독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 ④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원리로서 (가)보다는 (나)를 통해 구현된다.

3. 언론의 역할 이해

정답 해설 : ① 제1문은 언론이 정치인의 무능과 부패, 권력 남용을 견제하여 정치의 공적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언론이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언론의 기능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제시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 ③ 언론의 정보 제공을 통해 특정 쟁점과 주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 의제 설정 기능을 하지만 제시문의 강조 사항이 아니다.
- ④ 언론은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정치 사회화도 수행하지만, 제시문에서 이를 찾을 수 없다.
- ⑤ 다양한 정치적 이익 및 의사의 집약은 언론보다는 정당의 역할에 가까우며, 제시문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4. 헌법 소원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이해

정답 해설 : 사례는 헌법 재판소가 갑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나타낸다. ㄴ. 갑은 PC방 금연을 규정한 국민 건강 증진법 규정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ㄷ. 헌법 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ㄱ.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에 그 구제 수단을 거친 이후에 가능하지만 제시된 상황에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직접 다투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행정 소송은 행정 기관 처분의 위법성 등과 같은 행정상 분쟁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ㄷ. 갑은 국민 건강 증진법의 해당 조항이 행동 자유권이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며, 보건권은 금연 구역을 설정하여 지키려는 기본권이므로 갑이 주장하는 기본권과 충돌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5.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에서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이라는 단서를 통해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자연 상태에 대한 판단을 통해 영국의 로크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④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자율적인 행위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하여 국가 성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하였으며,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주장한 근대 학자는 몽테스키외이다.
- ② 사회 계약 후 개인들의 모든 권리의 포기를 강조한 학자는 홉스이다.
- ③ 로크를 비롯한 사회 계약론자들은 감정보다는 이성의 작용에 의해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보았다.

⑤ 사회 계약론자들은 공통으로 국가를 사회 계약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6.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이해

정답 해설 : 그림 (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원적으로 구성되므로 의원 내각제,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로 구성되므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③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형태인데,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역할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부 형태는 (나)이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 ④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은 (나)에서는 없고 (가)에서만 있다.
- ⑤ 의회 의원과 행정 각료의 겸직 허용은 (가)에서만 가능하다.

7. 복지 국가의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ㄴ. 복지 국가는 국민의 사회권(생존권) 보장을 위해 근대의 야경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탈피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ㄹ. 복지 국가의 원리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부 격차,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복지 국가의 원리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 ㄷ. 문화적 환경 조성은 문화 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깊다.

8. 정당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에서 갑국의 정당 제도는 양당제이고, 을국의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다. ㄴ, ㄷ 의원 내각제 하에서 다당제는 연립 정부의 구성과 이에 따른 정국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것은 양당제이다.
- ㄹ. 소수 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정당제는 다당제이다.

9. 국제 사회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사례에서 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하였고, 을국은 국제 공조 여부를 상대국과의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병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다자간 상호 방위 조약에 가입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행위에서 공통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국제 규범보다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적 판단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현실주의보다 자유주의에 가까운 판단이다.

④ 사례는 국내 정치 상황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우선시한 것을 나타낸다.

10. 선거구제와 선거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 교사의 말에서 ‘비례성’에 대해 A와 B의 견해가 다르다. A는 선출하는 대표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표의 수가 많을수록 ‘비례성’이 높다고 본 반면, B는 대표 결정 방식만으로 판단하고 비례 대표제가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보고 있다. ㄴ. A는 대표의 수가 많으면 대표성이 높다고 판단하므로 병국의 선거 제도가 을국과 같게 변화하면,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자가 적게 되어 ‘비례성’이 낮아지게 된다. ㄷ. B는 대표 결정 방식 중에서 비례 대표제만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보고 있으므로 비례 대표제를 소선거구 단수 다수제로 바꾸면 ‘비례성’이 낮아진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을국이 갑국과 같은 절대 다수제로 바꾸더라도 A의 주장에 따른다면, 대표의 수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비례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ㄷ. 병국이 대선거구로 변경하더라도 비례 대표제를 택한 것이 아니므로 B의 주장에 따른다면, 비례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11.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비로소 범죄로 성립할 수 있다. ㄱ, ㄴ 갑의 행위는 을의 허락 없이 을의 재물을 파손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기나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려는 긴급 피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법원이 갑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인 정당방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ㄷ. 자구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호하기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갑의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2. 주택 임대차 보호 제도 이해

정답 해설 : 병은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입주와 더불어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로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병은 A 주택의 경매시 단순한 채권자인 을이나 확정일자보다 늦게 저당권을 가진 정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정이 갑의 A 주택에 가지는 저당권은,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처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 점유할 권리는 아니다.
- ② 정의 채권액은 A 주택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지만 을의 채권액은 기재되지 않는다.
- ④ 공증은 해당 권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는 의미가 있지만 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 ⑤ 2013년 11월 7일 A 주택의 등기부 을구에는 정의 저당권이 기록된다.

13. 민사 소송 제도 이해

정답 해설 :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연관된 법적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① 을은 자신의 채권을 확실히 확보해 두기 위해 갑의 A 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A 주택의 처분은 제한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민사상 분쟁은 민사 소송 전에 민사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 조정 절차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 ③ 민사 소송 제기에 앞서 가압류 신청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 ④ 소액 사건 심판은 소송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액수만 가능하다.
- ⑤ 내용 증명 우편은 일정한 권리 행사를 하였다는 징표일뿐 강제 집행 절차와는 무관하다.

14.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건물 외벽 붕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건물 붕괴의 원인이 공사 잘못이라면, 병과 정이 지게 되며, 이러한 하자 있는 건물을 사용하도록 고의·과실로 승인한 담당 공무원 무도 책임을 질 수 있다. 건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을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소유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을~무가 고의·과실에 의해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관련자가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 ③ 병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병에게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병의 사용자인 정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② 병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이므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함께 진다.
- ④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공무원의 위법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⑤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갑은 건물의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인 을에게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5. 연소 근로자의 근로 보호 제도 이해

정답 해설 : ㄱ. 우리 나라의 근로 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연소 근로자 B는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ㄴ. 최저 임금 제도는 연소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동의할 수 있을 뿐이다.
- ㄷ. 연소 근로자는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16. 소년범에 대한 처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소년범에 대해서는 성인과 달리 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위해 다양한 특례가 인정된다. ⑤ 피의자 갑이 기소되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더라도 이는 무죄 석방이 아니라 유죄의 판결이므로 이보다 경한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원하는 항소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검사의 결정 전 조사는 소년부 송치뿐 아니라 공소 제기,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시행할 수 있다.
- ② 소년부 송치는 형사 재판이 아니므로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소년원 송치 처분 등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 ④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은 구속 피의자의 권리로서 공소 제기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7. 우리 나라의 헌법 기관 특성 파악

정답 해설 : 표의 빈칸에는 A: 국회, B: 국무회의, C: 대법원이 각각 들어간다. ⑤ 대법원은 명령·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판결에 판단 근거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는 감사원의 권한이다.
- ②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이다.
- ③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며, 이 기관의 결정에 대통령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 ④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18. 제한 능력자 제도 이해

정답 해설 : 밑줄 친 ㉠은 제한 능력자 제도이다. ㉡ 제한 능력자는 크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로 나뉘는데, 이들은 모두 일용품 구입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등 일상적 거래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제한 능력자 제도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제한 능력자 제도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권리 능력은 제한 능력자라도 가진다.
- ③ 성년자인 제한 능력자의 후견은 크게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으로 유형화된다.
- ④ 제한 능력자 제도는 행위 능력의 유무를 법률 행위 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19. 제조물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이해

정답 해설 : 사례는 유모차라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 구제에 대한 내용이다. ㄱ. 소비자는 유모차 제조사에 직접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한국 소비자원은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 미합의 시는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ㄷ. 소비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제조물 책임법상의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이에 따른 손해만을 입증하면 되고 제조사의 과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20. 국제법의 특성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은 국제 협약으로서 일종의 조약이다. 이러한 조약은 성문의 국제 법규로서 국제법이 존재하는 형식, 즉 국제법의 법원(法源)의 하나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조약의 체결뿐 아니라 비준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는 조약의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 ③ ㉠은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의 하나이다.

-
- ④ ㉠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시점은 비준서가 기탁된 때부터이다.
 - ⑤ 조약은 국제 관습법과 달리 체결 당사국에게만 적용된다.